

Issue Paper

2009. 3. 2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목차

요약

I. 청년실업 및 대책 현황

II. 일자리 해결의 기본방향

III. 3대 과제

IV. 시사점 및 제언

작성 : 류지성 연구전문위원(3780-8122)
serijhc@seri.org

태원유, 조현국, 이연오, 이안재
이중훈, 김소이

감수 : 정권택 연구위원(3780-8206)
kt.chung@samsung.com

《 Executive Summary 》

최근 청년 실업자는 37.2만명, 실제적인 실직상태는 1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청년인턴, 해외취업·연수 등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실 청년실업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 실업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대책은 이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실업자, 취업준비 등 실직상태 청년층의 대다수인 76.4%가 취업경험자이다. 실업자의 경우 현재 1년미만 실직상태인 청년 23.7만명 중 37.3%가 시간, 보수 등 작업여건 불만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다. 취업준비는 2009년 2월 실업자 수보다 훨씬 많은 43.4만명이며 이들의 62.6%가 대졸 이상이어서 고학력화가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자발적 이직과 취업준비의 상당수는 일자리 미스매치이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추정된다. 청년 실업자의 50.5%, 쉬었음 인력의 68.8%가 고졸 이하로 이들의 실업문제도 심각하다.

청년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불황으로 급증하는 실업을 해결하는 긴급일자리와 함께 구조적 청년실업도 대비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으로 양산되는 실업문제의 해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고용가능성 제고 등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수요 주체인 산업체, 특히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야 한다. 노동공급자인 학교도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스매치, 양질의 일자리 추구가 실업을 양산하는 만큼 학교가 청년실업자를 흡수하여 고용가능성 제고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력가산점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목표 대비 4% 실적에 불과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고용비용을 감축하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②창업 및 학교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인 벤처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연간 150억 예산, 66개인 학교기업을 대폭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층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③학교가 주도하는 역량개발형 일자리제공이 필요하다. 미스매치해소를 위한 수요자맞춤형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인 ‘직업아카데미+인력개발계좌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단순노무직보다는 ‘스마트 SOC+직업능력개발’, ‘일자리 Co-op’ 등 직업능력개발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미래산업인력의 선제적 육성을 위해 출연연구소와 기업이 연계된 인턴제,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하는 전문석사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기능에 대해 전문인력 보강, 고용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컨트롤타워기능 강화와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행정위주의 정책보다는 기업과 학교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주체간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I. 청년실업 및 대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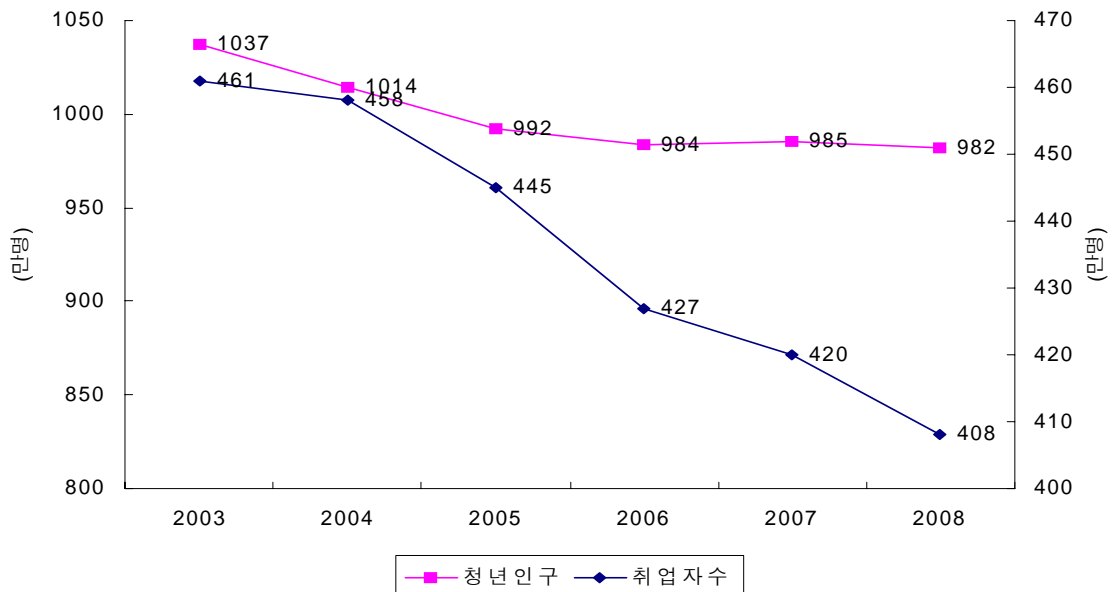
1. 청년실업의 특성

청년의 실제 실업자 120만명

□ 청년층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취업자의 감소 현상이 지속¹⁾

- 청년 취업자 수는 최근 5년간(2003~2008년) 약 52.2만 명 감소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6만 명이 감소

청년 인구 및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감소된 취업자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
 -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청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50.8%에서 2008년 55.2%로 약 4.4%p 증가

1) 청년은 15~29세 인구로 정의됨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단위: 만 명)

	청년 인구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2003	1,037	536	51.7%
2004	1,014	515	50.8%
2005	992	508	51.2%
2006	984	521	52.9%
2007	985	532	54.0%
2008	982	542	5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특히, 경기불황으로 실업자, 쉬었음, 구직단념자가 대폭 증가

- 청년 실업자는 2008년 2월 32.6만명(실업률 7.3%)에서 2009년 2월에는 37.2만명(실업률 8.7%)으로 4.6만명 증가
- 취업준비자, 쉬었음,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2009년 2월 현재 약 121만명에 달함

청년층의 실업

(단위: 만 명)

시기	공식실업 상태		실질 실업상태			실제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구직단념자	
2008.2	7.3%	32.6	47.1	30.2	3.4	113
2009.2	8.7%	37.2	43.4	36.3	4.4	1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실업자의 37.3%가 자발적 이직

□ 예상외로, 실업자, 취업준비자 등 실직상태의 청년층 중 76.4%가 취업경험자²⁾

2) 2009년 2월 자료임

- 실업자의 87.1%(32.5만명), 취업준비자의 70.7%(30.6만명), 쉬었음의 72.4%(26.3만명)는 취업경험자
-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 1년 미만 실직 상태인 사람의 약 68.1%는 임시, 일용직 종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직업 불안정을 경험

청년층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인력 취업경험 유무

(단위: 만 명, %)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취업경험 있음	1년 미만 (실직상태)	23.7(63.5)	9.6(22.2)	17.2(47.3)
	1년 이상 (실직상태)	8.8(23.6)	21.0(48.4)	9.1(25.1)
	계	32.5(87.1)	30.6(70.7)	26.3(72.4)
취업경험 없음		4.8(12.9)	12.7(29.3)	10.0(27.6)
계		37.2	43.4	36.3

주: 괄호 안은 구성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9년 2월)

□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중에서 1년 미만 실직상태의 30%가 시간, 보수 등 작업여건의 불만족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 특히 실업자의 경우, 1년 미만 실직상태 23.7만명 중 37.3%가 자발적인 이직
 - 경기불황으로 인한 직장의 휴폐업, 정리해고, 임시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져 실직하는 비자발적 실업자는 36.9%
- 취업준비자, 쉬었음의 경우, 50%이상이 개인과 가족관련 이슈에 의한 자발적 이직

청년층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인력 이직사유

(단위: 만 명, %)

이직 사유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계
개인, 가족관련 이유	5.7(23.9)	5.2(53.5)	8.9(51.6)	19.7(39.0)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8.8(37.3)	2.8(28.8)	3.6(20.7)	15.2(30.0)
경기불황 실업 (직장휴폐업, 정리해고, 임시계절직 기간만료, 일거리 無)	8.7(36.9)	1.4(14.7)	4.7(27.3)	14.8(29.4)
기 타	0.5(1.9)	0.2(3.0)	0(0.4)	0.8(1.6)

주: 괄호 안은 구성비, 기타 이유로는 육아, 가사, 심신장애 등이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9년 2월)

고학력화도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

- 2009년 2월 현재 취업준비자는 43.4만명으로 실업자 37.2만명보다 많으며, 취업준비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약 62.7%
 - 취업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자 중 48.4%(21만명)는 1년 이상 장기 실직 상태로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계층으로 추정
 - 특히, 전문대졸 이상인 취업준비자는 27.2만명으로 동일 학력 실업자의 1.5배에 달함
 - 이들 중 1년 이상의 장기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은 14.1만명
- 통학인구를 제외한 청년층 고용률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화가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를 유발³⁾
 - 통학인구를 제외한 고용률은 2003년 70.0%, 2008년 69.7%로 거의 변화가 없음

통학인구를 제외한 고용률 추이

(단위: 만 명)

연 도	통학인구를 제외한 고용률	생산가능 인구	취업자수	통학인구
2008	69.8%	982	408	400
2005	70.2%	992	445	358
2003	70.0%	1037	461	376

주: 통학인구를 제외한 고용률은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통학인구)로 계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3) 통학인구를 제외한 고용률은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통학인구)로 계산

실직 상태의 과반수가 고졸 이하

- 고졸 이하 실직상태(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는 60만명으로 청년 전체의 49.5%
 - 실업자의 경우 고졸 이하는 18.8만명으로 청년 전체 실업자의 50.5%
 - 고졸 이하 실직상태 중 쉬었음이 25만명으로 청년층 전체 쉬었음의 68.8%를 차지
 - 단, 고졸 이하 쉬었음 중 45.8%가 1년 미만 실직상태로 무기력한 장기 실직(NEET⁴)은 아니어서 적절한 유인 도구만 있으면 경제활동인구화 가능

청년층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학력별 취업경험 유무

(단위 : 만명, %)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전체	1년미만(실직기간)	23.7(63.5)	9.6(22.2)	17.2(47.3)
	1년이상(실직기간)	8.8(23.6)	21.0(48.4)	9.1(25.1)
	취업경험없음	4.8(12.9)	12.7(29.3)	10.0(27.6)
	계	37.2(100.0)	43.4(100.0)	36.3(100.0)
고졸 이하	1년미만(실직기간)	13.0(68.9)	3.7(23.1)	11.5(45.8)
	1년이상(실직기간)	3.7(19.6)	6.9(42.5)	6.2(24.9)
	취업경험없음	2.2(11.4)	5.6(34.4)	7.3(29.2)
	계	18.8(100)	16.2(100)	25.0(100)
전문대졸 이상	1년미만(실직기간)	10.7(58.0)	5.9(21.7)	5.7(50.6)
	1년이상(실직기간)	5.1(27.6)	14.1(52.0)	2.9(25.4)
	취업경험없음	2.6(14.3)	7.2(26.3)	2.7(24.0)
	계	18.4(100)	27.2(100)	11.3(100)

주: 괄호 안은 구성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9년 2월)

4)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청년 무직자(쉬었음 내지 구직단념자)를 의미

2.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현황

- 현재 정부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총력을 경주 중이나 아직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정부는 2009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직업훈련, 진로지도, 장려금지원, 종합고용서비스, 창업지원으로 나누어 33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정부의 2009년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내 용
1. 인턴지원(5개)	청년인턴제/ 행정인턴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관광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
2. 글로벌 취업지원 (14개)	해외취업연수/ 해외건설인력 양성/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4년제 대학생 해외인턴십/ 글로벌 무역인력양성/ 재외공관 인턴/ 국제전문 여성인턴/ 글로벌 농업청년리더 양성/ 미국 연수취업(WEST)/ KOICA해외봉사단/ 대학생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인터넷 청년 봉사단/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단/ 미래산업분야 청년리더 양성
3. 직업훈련(5개)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우선선정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한국폴리텍기술 기능인력 양성
4. 진로지도(5개)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확충/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여대생 캐리어 개발 지원/ 단기복무 장병 취업 캠프/
5. 장려금 지원(1개)	청년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6. 종합고용서비스(2개)	종합직업 체험관 신축/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7. 창업지원(1개)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 청년실업대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인턴, 해외취업 및 연수 등은 그 실효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
- 청년인턴제 전체 목표(53,049명) 대비 실적(14,276명)은 26.8%에 불과

-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4년제 대졸자에 맞춰져 고교·전문대 출신 이하 구직자는 소외
- 고졸이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

청년인턴제의 활용현황

	활용처	채용목표	실적(달성률)
행정인턴	정부와 지자체	중앙 정부:5,284명 지방정부: 5,640명	중앙정부: 4,641명(88%) 지방정부: 5,706(101.1%)
공공인턴	공기업 근무	12,000명	2,509명(21%)
중소기업인턴	중소기업 (5인이상 300인미만)	25,000명	1,100명(4.4%)
해외인턴	해외 사업장	5,125명	290명(5.7%)
계		53,049명	14,276명(26.8%)

자료: 신문사 보도 자료 종합

II. 일자리 해결의 기본방향

□ 경기불황으로 인해 급증하는 실업을 해결하되 구조적 청년실업도 대비

- 최근 급증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긴급일 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
- 실업자 37.2만명과 이들 중 특히 비자발적 실업자는 일자리가 더욱 시급
- 동시에, 고학력화가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므로 대학 졸업 후의 사후적 실업정책보다는 조기 진로지도, 역량개발 등의 예방정책을 통해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

□ 실직상태인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제시

- 자발적 이직으로 양산되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양질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

- 장기 취업준비생은 창업,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취업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 끄집어 낼 필요
 - 동시에, 쉬었음의 대부분은 무기력한 NEET가 아니므로 이들 역시 경제활동인구로 적극 유인
- 대졸뿐 아니라 고졸 이하 청년 실업자에 대한 긴급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도 강화
 - 현재 청년실업 대책의 대부분은 고졸 이하의 취업취약계층은 소외된 대졸 미취업자에게 초점(예, 행정 인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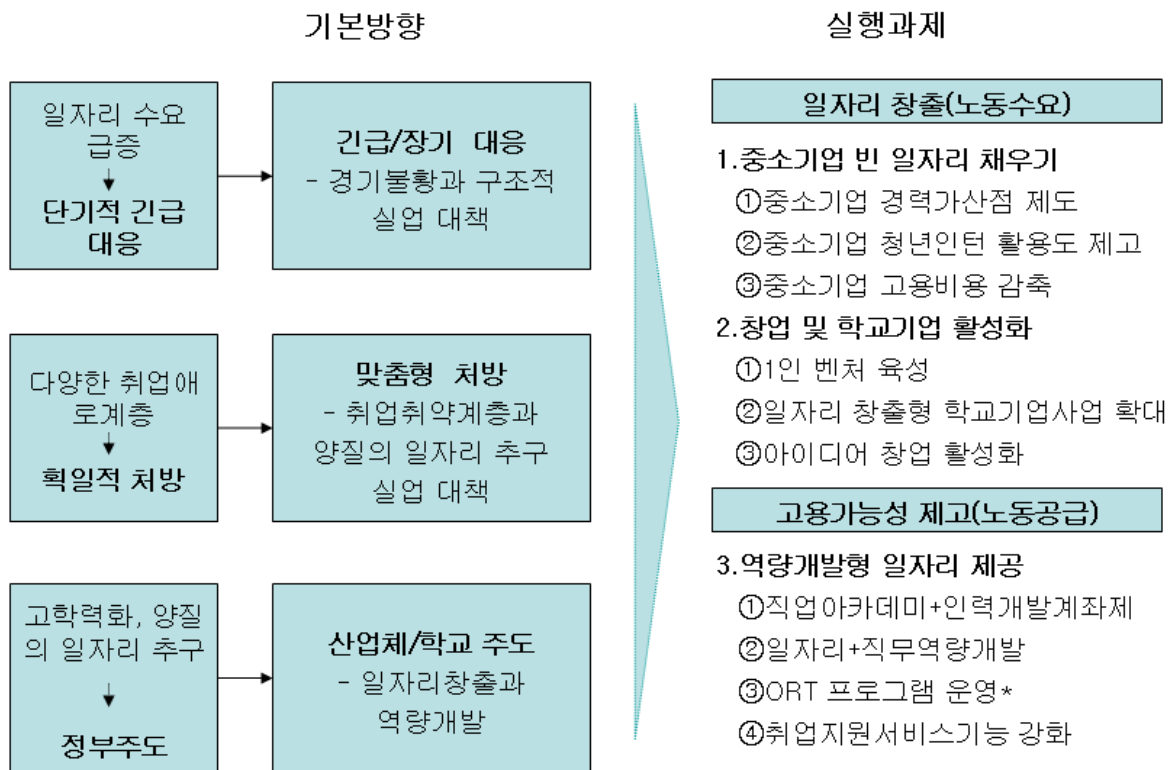
□ 산업체/학교가 일자리를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을 강화

- 정부 입장의 밀어붙이기식 대응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산업체, 노동공급자인 학교 및 취업희망자의 니즈를 고려
 - 청년인턴의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약 10만명을 추진 중이나 일자리 지속성, 고용가능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을 우려
- 일자리 주체인 산업체와 특히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 현재 중소기업인턴은 목표 대비 4%정도만 충원되는 실정으로 향후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수요지향적 대안으로 보완할 필요
- 미스매치, 양질의 일자리 추구가 실업을 양산하는 만큼 학교가 청년실업자를 흡수하여 고용가능성 제고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
 - 청년층을 임시, 단순노무 일자리로 내몰기보다는 당분간 학교에서 직업역량을 개발해 주면서 미래산업인력의 선제적 육성, 창업,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노동수요측면의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노동공급측면의 고용가능성을 제고

- 노동수요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을 촉진하는 ①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의 직접 창출인 ②창업과 학교기업 활성화
- 노동공급은 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주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③역량개발형 일자리 제공 등이 필요

청년실업 대책 도출 프레임



주: ORT(On the Research Training)

대상자별 맞춤형 대책(요약)

실행과제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대졸	고졸	취업준비자	쉬었음	
고용 가능성 제고 (노동 공급)	역량 개발형 일자리 제공	직업아카데미+ 인력개발계좌제	- 직무능력개발 - 인력개발 계좌제	- 직무능력개발 - 인력개발 계좌제	- 직무능력개발 - 인력개발 계좌제	- 직무능력개발 - 인력개발 계좌제
		일자리+직무능력 개발 제공	- Smart SOC 등 일자리+직업능력 개발 - 일자리 Co-op	- 일자리 + 직업능력개발		- 학교+공공도서 관활용(취업능 력개발)
		ORT프로그램 운영	- On the Research Training -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 -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 학교별 취업지원서비스 투자 강화(외부전문가 활용) - 직업이동의 장단점 교육 강화			
일자리 창출 (노동 수요)	중소 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중소기업 경력가산점 제도			-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 중소 기업 근무에 대한 경력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홍보 강화 고졸대상 집중홍보			
		중소기업 고용비용 감축	- 청년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 사회보험료 1년간 유예 - 10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규정 적용 유예 - 중소기업 범주 조정을 통한 중견기업 성장 유도			
	창업 및 학교 기업 활성화	1인 벤처 육성	- '1인 벤처'를 90년대 IT 벤처 활성화 수준의 국가 아젠다로 채택 - 1인 창업이 유망한 분야 발굴, 지원			
		일자리 창출형 학교기업사업 확대	- 학교기업당 재정 지원 확대(수익성 제고) - 학교기업수 대폭 증대를 위한 재정 확충			
		아이디어 창업활성화	- 벤처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일부를 청년 아이디어 구입에 투입 - 전국단위의 창업 컨테스트 실시			

Ⅲ. 3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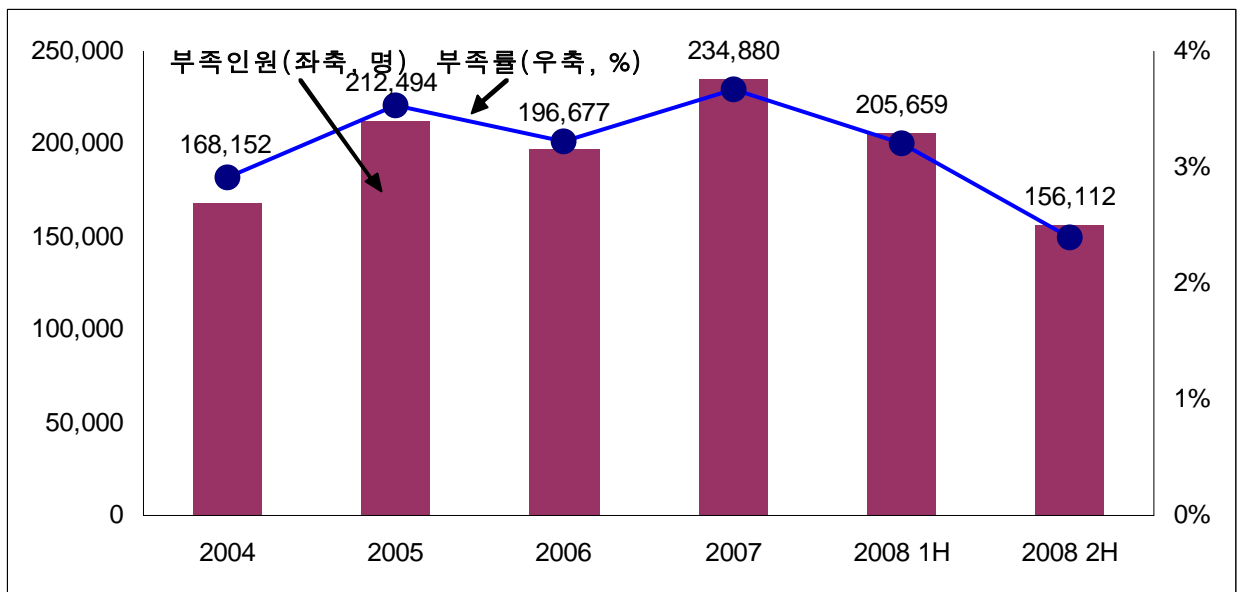
1.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1) 필요성

□ 일자리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족인원은 매년 20만명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 현재 156천여명이 부족(부족률 2.4%)
 - 2008년 하반기 대기업(300인 이상)의 부족인원은 1만5천여명(부족률 1.0%) 수준으로 중소기업 부족인원의 1/10 수준
-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구인난이 가중되는 상황
 - 기업 규모별 부족률(2008년 하반기 기준) : 5~9인(3.4%), 10~29인(2.4%), 30~99인(2.0%), 100~299인(1.7%), 300인 이상(1.0%)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



자료 : 노동부 인력수요동향조사

- 운전, 생산 등 단순직뿐 아니라 사무관리자, 연구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도 상당 수
-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을 직종별로 보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의 부족인원이 2만3천여 명으로 가장 큰 비중(15%)을 차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직종별 부족인원 분포 (2008년 하반기 기준)

직종	부족인원	비중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3,396	15.0%
운전및운송관련직	17,235	11.0%
기계관련직	15,333	9.8%
영업및판매관련직	14,340	9.2%
전기전자관련직	10,108	6.5%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9,037	5.8%
재료관련직	8,833	5.7%
정보통신 관련직	7,815	5.0%
건설 관련직	7,651	4.9%
음식서비스관련직	6,107	3.9%
보건, 의료 관련직	5,814	3.7%
화학관련직	5,690	3.6%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5,160	3.3%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4,255	2.7%
섬유및의복관련직	3,024	1.9%
경비및청소관련직	2,782	1.8%
사회복지및 종교관련직	2,636	1.7%
금융, 보험관련직	2,543	1.6%
식품가공 관련직	2,294	1.5%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649	1.1%
관리직	204	0.1%
법률, 경찰, 소방교도 관련직	110	0.1%
농림어업 관련직	99	0.1%
합계	156,112	10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력수요동향조사

-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상당수 대졸자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준비 상태에 있으나, 이들 일자리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갈수록 적체현상이 심화
- 취업준비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08년 현재 45만 5천여 명에 달함

2009년 공무원 및 공기업 시험의 경쟁률

- 금년 4월 실시되는 2009년도 9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2,350명 모집에 140,670명이 지원해 5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2008년도 공채의 경우 164,690명이 응시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09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경우 72명 모집에 10,502명이 지원해 1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연이은 취업 실패로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나이, 경력, 전문능력 부족 등으로 산업계 취업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
- 장기 미취업자의 경우 “쉬었음”, “구직단념”, “실업자” 등으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강함

2) 대안

① 중소기업 경력 가산점제도 실시

- 중소기업 일자리의 수요·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유인(誘因)을 확충하여 취업준비생들을 흡수할 필요
-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낮은 사회적 인식, 낙인효과(Stigma effect) 등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많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유인은 매우 부족
- 따라서 이들 기피요인들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제시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

-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공개 채용시 중소기업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
 - 현재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 공채시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중소기업 근무경력에도 적용한다면 상당수의 취업준비생을 중소기업으로 유도 가능
 - 9급 공무원 채용의 경우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0.5%~3%의 가산점 부여
 - 나아가 동 제도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할 경우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취업준비생의 과다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중소기업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
 - 다만 숙련인력의 이탈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거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 가산점 제도 적용의 대상기업 및 수혜자의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형평성 시비, 제도의 매력도 저하, 인력 이탈의 부작용 등을 사전에 방지
 - 단, 가산점 제도의 수혜를 받아 공공부문으로 전직하는 인력은 공공부문 공채규모 등을 감안할 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 가산점 제도 개요 (案)

- 가산점 제도의 대상 기업 및 인력
 - 대상기업의 범위를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회사법인” 등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실적, 성장성 등도 감안하여 대상기업의 요건을 설정
 - 가산점 수혜대상자도 제도 도입 이후의 “신규입사자(전직, 재입사 제외)” 등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기존 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
 - * 형평성(재직자, 신입) 시비 방지 및 숙련인력 이탈 간 조율이 필요
- 제도의 주요 내용
 -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채용시 적정 가산점 부여
 - * 예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 3%, 3년 이상 근무 - 5%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양질의 인력 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과다한 취업준비생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

- 중소기업 취업의 매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
- 따라서 우수 중소·벤처기업 등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

②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홍보부족, 적용제외 규정 등으로 활용이 저조

- 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추가 지원(월 50~80만원)

- 금년 정부의 중소기업 인턴제 목표는 2만 5천명이지만 홍보부족 및 적용 제외 규정으로 2009년 3월 5일 현재 1,100명(4.4%)만 이를 활용

- 전문대졸, 고졸실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홍보를 강화
 - 청년인턴제는 주로 4년제 대졸사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전문대, 고졸출신자는 상대적으로 소외
 - 실제 행정인턴 등 대다수가 4년제 대학졸업자에게 유리한 조건

 - 전문대졸,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도를 제고

 -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경영·회계·사무관련직 등 양질의 일자리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졸을 포함한 청년인턴을 적극적으로 유도

- 지원제외 규정 축소 및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층의 지원을 유도
 - 3개월 이내의 취업사실이 없어야 하는 지원자 적용제외 규정을 철폐하여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가 청년인턴을 활용 할 수 있게 할 필요
 - 현재 29세 이하로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실업상태의 청년이면 청년인턴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으면 제외 되어 활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대상기업의 적용제외 규정 중 고용보험 미사업장 규정을 삭제하여 참여기업을 확대
 - 현재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거나 소비향락업체나, 파견업체, 직업소개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숙박음식업종은 참여할 수 없음

③ 중소기업 고용비용 감축

- 취업애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청년실업자 전체로 확대 실시
 - 현재 구직 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취업애로자(저학력, 경력 및 작업기술의 부족 등)를 대상으로 임금 보조를 실시
 - 채용하는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간은 30만원의 임금 보조(wage subsidy)를 지급
 - 청년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폭을 저학력, 경력 및 작업기술의 부족 등에 제한을 두지 말고 29세 미만의 전 청년층으로 확대
 - 단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한 기준만 맞으면 지급

- 청년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 5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의 4대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율(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임금의 8.31%로 비용부담이 과다한 형편
 - 프랑스는 ‘고용촉진계약’을 통해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사회보장비를 면제해주고 매달 보조금을 지급

- 상용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청년층 고용창출을 유도
 -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영구직 근로자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고용창출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중소기업의 범주를 재조정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의 지원책이 30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그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꺼림
 - 대-중소기업의 정책적인 분류로 인해 우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특혜를 받기 위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사내 하청 등의 비정상적인 아웃소싱을 하여 고용 증가에 역행(조준모, 황성수, 2009 “고용과 성장”)
- 기업의 범주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재조정하고 성장단계별 유연한 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⁵⁾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규제의 사례

구분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규제
자금	- 자금지원, 금리우대, 보증특례	- 부채비율 200% 제한 - 계열사 간 채무보증 제한
투자	- 벤처캐피탈, 소상공인 창업지원	- 출자 총액 제한 - 계열사 간 상호출자 제한
기술	- R&D 지출 혹은 증가분에 대한 세 감면 - 혁신 기업 육성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 감면)
판매	- 공공구매 우선, 홍보·해외진출지원	- 독과점 규제, 기업결합 심사
입지	(200 m ² 이하 시설 제외)	-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
기타	- 조세감면, 경영컨설팅 등	- 지배구조 등

주: ()는 인센티브 축소(대기업)나 규제예외(중소기업)을 의미, SERI, 일류중견기업 성공요인
 자료: 조준모, 황성수(2009) “고용과 성장”

2. 창업 및 학교기업 활성화

1) 필요성

현재 120만명 이상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으며 창업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

5) 조준모,황성수(2009)는 정책 대안으로 초기 생산요소 지원, 성장단계에서는 R&D지원, 중견화된 이후에는 경영기법의 전수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에 비해 일자리 창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태
 -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실질GDP증가율)은 2001년 0.51에서 2008년에는 0.25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
 - 1998년 IMF위기사 극심한 일자리부족을 벤처창업으로 극복한 것처럼 다시금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 단, 당시의 벤처거품을 교훈삼아 건강한 창업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자발적 실업청년에게 창업이라는 도전적인 기회를 부여
- 특히, 학교기업은 실패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기업을 통한 창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
 - 청년창업은 대기업 등 번듯한 직장을 갖는데 주력하여 휴학, 취업 재수를 감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대안

① 「1인 벤처」를 육성

- 「1인 벤처」를 90년대 IT벤처 활성화 수준의 국가 아젠다로 채택
- 5,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1인 벤처 대상의 투자·기부에 대해서는 세감면 혜택 부여
 - 1인 벤처의 기대수익률이 벤처기업 대비 높지 않은 것을 고려
 - 벤처협회의 인증을 받은 1인 벤처에 대해 간이 회계·세무처리 인정, 공공건물 무상임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창업체험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
 - 창업아이디어를 심사 및 선발한 후 지원 역량이 있는 공공기관에 배정
 - 출연연구소가 창업 지망 이공계 졸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터로서 역할

독일 슈뢰더 정권의 「1인 창업회사」 육성

- 취업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기업 설립을 적극 지원
 - 2003년 1월 1일 「자생기업유치법(Existenzgründungsgesetz)」 발효
 - 불법적인 노동과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
- 실업보험 및 보조금을 받는 사람, 국가 고용정책과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창업을 할 경우에 정부가 창업자금을 지원
 - 지원 요건은 노동연방청에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
- 창업자는 자신의 실업수당 및 사회보험 수당의 3년 치를 창업비로 지원받으며, 정부 보조금은 최장 3년간 지급(세금은 면제)
 - 1년차 월 600유로, 2년차 월 360 유로, 3년차 월 260유로 지급

(독일정부의 'Agenda 2030'에서 2003~2006년에 추진한 「1인 창업회사 (Ich-AG(Aktiengesellschaft))」 육성 사례)

□ 청년들의 1인 창업이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제공

청년 1인창업 유망분야와 정책수단

	유망 분야	정책 수단
인터넷상거래	쇼핑몰 운영, 블로그 판매점, 중고품 매매, 명품 소개	미디어 개방(코드 및 사용권), 사용료 인하, 인증 지원
문화콘텐츠	게임 개발, 시나리오 작성, 사용자 모니터링, 문화원형 발굴, 지역 문화 지킴이	콘텐츠 투자 확대(교육용 등), 지역문화 사업 연계
용역·업무지원	SW 개발, 아웃소싱 수탁, 홍보자료 제작, Back-office	정부구매 확대, 재교육 실시, 전문가 매칭
고객관리	1인점포(프랜차이즈), 소비자조사, 지역별 A/S 대행, 맞춤 고객관리	공공건물 제공, 공공DB접근허용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아이디어·특허	아이디어판매, 특허조사 대행, 지식거래, 신제품 체험	지식캐피털 지정, 아이디어평가, 지식거래소 운영, 특허비용 보조
사회적 기업	신용회복 지원, 방과 후 교육, 신빈곤층 맞춤복지, 사회공헌연계	복지예산 활용, 자격증 개발, 기업출신 멘토 지정

자료 : 유망분야는 '이민화, 「창조경제와 1인 창조기업」(미발표자료)'를 참고

② 일자리 창출형 학교기업사업 확대

- 학교기업은 현장 적합형 인력양성,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 참여, 산업체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시작
 - 2008년 66개 학교기업이 운영 중이며, 총예산은 150억원으로 학교기업당 2억원~4.5억원 지원

학교기업 사업성과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학교기업수	40개	45개	59개	48개	66개
정부지원금	100억원	130억원	150억원	150억원	150억원
총매출액	2,283백만원	10,470백만원	16,754백만원	16,163백만원	14,101백만원
고용인원	113명	304명	594명	281명	511

자료: '09년 학교기업지원사업설명회 자료(한국산업기술재단), 고용인원은 한국산업기술재단 내부 자료

- 현재 교육성과에 치중하는 학교기업을 '수익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체제로 육성
 - 학교기업 수의 대폭 증대를 위한 재정 확충과 학교기업당 재정지원 확대
 - 전문계, 전문대, 대학 중 30%만 참여해도 300여개의 학교기업이 가능
 -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펀드 조성,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학교기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충
 - 학교기업의 경영 전문성 및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제도 개선, 지원 등을 강화
 - 현재는 학교 내부인력(교사, 교수)이 교육목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업체로서의 수익성 창출에는 취약

③ 아이디어창업 활성화

- 초기단계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과 인큐베이터를 육성

- 미국 Intellectual Venture, Invention Capital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도입
 - 「garage.com」은 ▷아이디어 채택 시 6천 달러, ▷특허 출원 시 1천 달러, ▷특허 등록 시 1천 달러, ▷수익 발생 시 10% 이내 분배
- 벤처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일부를 청년아이디어 구입에 투입
 - 건당 500만원의 1만 개 아이디어를 수집할 경우 500억 원의 자금 소요
 - 유망한 아이디어에 대해 1천만~5천만 원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기존 창업지원·벤처육성 자금을 활용)

□ 전국 수준의 창업컨테스트를 개최하고 선발된 아이템에 대해 창업 지원

- 단계별·지역별 경쟁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전국 수상자에게는 창업이 가능한 규모의(1억 이상) 투자를 집행
 - 소자본이 소요되고 조기 창업이 가능한 지식서비스 분야를 권장
- 관련 업종의 벤처기업 연결, 전문 멘토 지원 등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④ 창업 인프라 선진화 및 확충

□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경감

- 청년창업의 경우 자본금 하한, 공간 확보 의무 등에서 예외를 인정
 - 한국의 법인 설립에 따른 직간접 비용은 130만 원으로 캐나다의 4배
 - 일본은 상징적으로 ‘자본금 1엔 회사’를 허용
- 부가세,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간이 회계처리를 적용
 - 법률구조공단과 유사한 (가칭)회계세무지원공단을 운영

□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창업절차를 간소화

- 작성 서류, 회사등록 기간 등에서 세계 최고의 효율을 지향
 - 1페이지 창업신고서, 온라인 접수, 24시간 이내 회사 등록 등

- 등록(중기청)과 세무관계 신고(세무서)의 2단계로 절차를 압축
 - 중기청이 창업 관련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들이 협력

창업절차 개선 방안

구 분		현재 단계	캐나다	청년창업(안)
법인설립 준비	상호	등기소(-)	-	-
	정관	공증사무소(8)	-	
	등록세	지자체/은행(2)	-	
설립 등기		등기소(17)	산업성(4)	중기청(1)
사업자 등록		세무서(5)	세무서(3)	세무서(1)
4대보험		보험공단(-)	-	-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	-
		32개	7개	2개

주: ()는 제출서류 숫자

자료: 인터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 2008. 10, p.495

□ '창업진흥원'(대전 소재)을 청년창업 지원기관으로 특화

- 대학 지원 위주에서 탈피, 청년주도의 창업지원 허브기관으로 위상 설정
 - 현재는 9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교수 컨설팅비용 등에 주로 사용
- 대학생 창업모임들과 공격적으로 협력(수동적 공모·선정 지양)
 - 국내에는 '대학생창업연합회', 'SIFE(Students in free enterprise)', '청년독립기업' 등 창업커뮤니티들이 활동 중

□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업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중견기업, 벤처 등이 청년창업 소기업들과 의도적으로 생태계를 형성
 - 중기청 쿠폰제를 활용하여 컨설팅, 인력파견 등 발생비용을 부담
- 실패하는 청년창업자에 대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도전 기회를 부여
 - 신용보증 등이 일정 한도까지 발생 채무를 전액 변제
 - 창업 실패 경험자는 취업, 재창업 심사 시에 가산점 부여

- 청년창업 '스토리'를 언론이 발신하고 초중등 교과 과정에도 반영

3. 역량개발형 일자리 제공

1) 필요성

- 청년실업의 본원적 문제는 산업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로부터 발생
 - 산업 수요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제대로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 기업이 종업원을 미충원하는 사유로서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음'이 43.5%'에 달할 정도로 직무능력개발은 시급(노동부 2008년 하반기 인력수요동향 조사)
- 학교가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가능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긴급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는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되 동시에 학교가 직무능력개발프로그램을 제공
 - 최근 실시되는 청년인턴은 직업역량개발 효과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미취업졸업생에게 직업능력개발과 인턴을 동시에 제공하는 접근방법이 필요
 - 특히 일단 학교를 벗어나면 취업 가능성이 급속히 낮아져서 장기 취업준비 등 취업 비용이 증가하므로, 학교에 머물면서 저비용으로 실무지식과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배려
- 소학력 및 소학교단계 모두 청년층에게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기회 부여

- 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 주로 4년제 미취업대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대, 고졸의 취업에로계층도 상당수
 - 실업자와 취업준비, 쉬었음 등에서 고졸 이하 및 전문대 졸업자의 비중이 75%를 차지
- 대졸뿐 아니라 고졸 이하를 위한 학교의 역할이 욕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등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

□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

- 취업관련 전문인력, 정보서비스시스템, 산업체 및 취업관련기관과의 취업 네트워크 등을 강화할 필요
- 200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졸업 및 중퇴자 청년층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취업’이 다수
 - 가족 친지에 의한 소개(21.5%), 직장근무자로부터의 소개(12.5%), 학교 선생님 추천(8.8%) 등
- 반면,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 내 취업소개기관, 직업(취업) 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은 6.1%에 불과
 - 이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기간을 장기화하는 요인

졸업/중퇴 청년층의 주된 취업경로

(단위: 만 명, %)

	졸업/중퇴 취업자	가족/ 친지소개 (추천)	직장근무 자 추천	학교 선생님 추천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	공개 시험	특별 채용	그 외 ^{주)}
2007년	353.7 (100.0)	76.1 (21.5)	44.9 (12.7)	32.8 (9.3)	97.6 (27.6)	66.9 (18.9)	14.1 (4.0)	21.3 (6.0)
2008년	347.1 (100.0)	74.7 (21.5)	433 (12.5)	306 (8.8)	942 (27.1)	707 (20.4)	124 (3.6)	213 (6.1)

주: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내 취업소개기관, 직업(취업)박람회 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 2008. 5

2) 대안

① 「직업아카데미+인력개발계좌제」 운영

- 학교에 직업아카데미(Professional Academy)를 두고,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미취업졸업생들을 위해 전문대학, 대학 등에 직업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수요자 맞춤형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 희망하는 직종에 필요한 전공 및 실무지식, 취업준비를 위한 토익 등 소위 다양한 스펙(spec)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 직업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위한 인력개발계좌제를 도입
 - 현재 실시 중인 취약계층 대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청년층의 다양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
 - 훈련기관은 지역내 직업학교, 직업전문학원 등이며 훈련비용지원도 200만원 한도
 - 청년층을 위한 별도의 「인력개발계좌제」를 만들어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해결
 - 훈련기관을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등으로 확대하고 훈련과목도 제한을 철폐
 - 동시에, 지원금액도 확대하여 6개월~1년 정도의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현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200만원 지원으로는 3개월 이내의 직업학교 내지 학원 수강이 대부분인 형편

직업아카데미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案)

- 희망직종 관련 실무 또는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6개월-1년동안 실시
 - 이를 위해, 개별 대학뿐 아니라, 지역대학간 연계, 전문대학-대학의 연계, 전문계고-전문대의 연계 등 다양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
- 지역대학 중 특정 전공에 브랜드 명성이 있는 경우, 지역대학들이 제휴하여 특별강좌 개설을 요청하고 희망하는 미취업졸업생에게 수강할 기회를 제공
- 미취업(대학, 고교)졸업생이 동일법인의 전문대 혹은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과목 수강을 희망할 경우, 추가등록비 부담 없이 수강을 허용
 - 전문대나 사회교육원을 갖지 않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타학교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수강 기회를 제공
- 수강 비용은 인력개발계좌제를 이용
 - 교재 및 실습 소모품 비용은 학생 부담, 학생의 강사료와 시설이용료는 인력개발계좌제 재원을 이용

② 「일자리+직무능력개발」 을 제공

- 대졸 실업청년들에게 스마트 SOC⁶⁾ 일자리, 대학 소재 지역 비영리기관, 또는 지역에 대한 봉사 등과 일과 후 학습을 병행
 - UC San Diego 대학은 비영리 기관의 공학적 문제를 팀을 이뤄 해결함으로써 학습과 지역봉사를 함께 거두는 효과
 - 호수의 환경모니터링 장치, 장애아동을 위한 장난감 개발 및 수리 등을 수행
 - 동시에 문제해결방법, 공학적 스킬, 리더십 등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짐
 -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졸 미취업인력을 스마트 SOC, 지역사회의 공익적 봉사 등에 투입하고 직업능력개발도 병행
 - 전산프로그램 설계, 컴퓨터 교육, 설비 및 기계장치 수리 등에 대한 근로와 함께 대인관계 스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등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

6) 삼성경제연구소는 「SOC 투자의 신조류, 스마트 SOC(2009.3.18)」 보고서에서 스마트 SOC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똑똑해진 사회 인프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투자는 양질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 특히 교육부문의 스마트 에듀에 대한 투자는 정보DB 및 콘텐츠 개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

-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제공 및 재정지원, 대학은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고졸 청년실업자 상당수는 취업에 취약한 계층이므로 일자리와 함께 직무능력개발
 - 단순노무적인 일자리 제공보다는 공익적 사업과 일과 후 학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학교시설 개보수, 재활센터 장비수리, SOC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투입
 - 전문계고, 전문대학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기초직업능력을 포함한 직업교육을 실시
 - 강사는 학교 교사(수)를 비롯하여 기업체 유희인력, 실직상태에 있는 전문인력 등을 적극 활용

미국 민간자원보존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

- 대공황기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기구(1933~42년)로 청년들을 식목, 댐 건설, 도로·철도 개설 등에 투입
 - 평균 나이 18~19세, 총 3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 단원들은 엄격한 규율 하에 작업캠프에서 생활했으며 정부는 의식주와 월 30달러 수당을 제공(가족에게 25달러 송금, 나머지로 생활)
 - 낮에는 작업을 하고 일과 후에는 글쓰기 등 교육을 받았음
- 근무 경력이 이후 취업에 도움이 되었고, 현재 국가, 주, 지역단체 프로그램의 선도적 모델로 평가

- 일자리 Co-op을 실시하여 현재의 임시적 일자리를 위한 인턴에서 산학연계를 통한 직무능력개발형 인턴으로 개념을 전환
 - 소수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학생 Co-op프로그램을 미취업졸업생에게도 적용
 - 인턴 채용이 가능한 기업들의 공통 직무수요를 파악하여 학교에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기업인턴과 특별강좌 수강을 번갈아 하는 형태로 운영

성균관대학 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 사례

Co-op 프로그램의 기본구도는 산업체의 요구에 기반하면서 학습과 현장실습을 번갈아 하는 형태로서, 학기 중에는 취업소양교육과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중심 전공교육을 강화하고 여름학기에는 연구현장 실습을 수행함. 3학년 때에는 8개월간 산업체 연구인턴십을 통해 연구개발업무를 실제로 수행함.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1학년	취업소양교육 (산업체 CEO 강의)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e-러닝)	
2학년	현장중심 전공 교육 (설계+e-러닝)	연구 현장 실습	대학원 현장 학습 (연구프로젝트 학습)	연구 현장 실습
3학년	산업체 현장 학습 (주1회 방문 근무)		산업체 연구 인턴십 (총 6~8개월 근무)	
4학년	대학원 현장 학습 (연구프로젝트 학습)	연구 현장 실습	Capstone Design 또는 글로벌 인턴십	

자료: 최재봉(2006),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
SERI Seminar

- 기업의 직무 수요에 따라 전문계고, 전문대, 대학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
 - 기업과 정부는 인턴에 대한 급여 지급, 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장소와 강사를 제공
- 청년층-중고령층이 함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공공도서관을 활용
- 현재의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시설로는 중고령층의 실업급부를 주는데 급급하며 실업 탈출을 위한 컨설팅 및 전직지원은 한계
 - 공공도서관 607개, 학교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년층-중고령층의 공동실업탈출 전담팀을 운영
 -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같이 할 수 있는 창업 또는 전직을 지원, 공동 실업 탈출을 위한 지식공유 및 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

미국의 공공도서관 활용

- 미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실업자 전직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각종 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개최
- 한국은 2013년까지 900개 도서관을 확충해 국민 5만명당 1개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
- 2007년 12월 현재 1 도서관당 인구수가 미국 대비 2.6배, 일본 대비 1.8배로 OECD 선진국 대비 현저히 부족

③ 미래산업 일자리를 위한 고급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

미래산업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업대책에 적극 활용

- 이공계 졸업생을 위한 출연연구소 연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일정기간 연수 후 기업 R&D인력으로 채용
 - 대졸 석/박사 → 출연 연구소 연수, 인턴 → 기업연구소 채용 단계를 거치는 일종의 「On the Research Training」 개념
- 일본 産業技術綜合研究所(AIST)는 대학으로부터 인력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R&D실무능력을 개발시킨 이후 산업체로 보내는 과정을 실시 중

학/석사 통합과정인 전문석사, 전문인양성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업인력 양성과 함께 미취업졸업생의 학교체류(Stay in School) 효과도 기대

- 학/석사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 1학기 또는 1년은 산업체에서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현장참여형 논문 등을 작성, 향후 관련 산업체 취업
- 3+2제 학/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유럽대학의 경우, 석사(2년)과정은 직업 훈련프로그램(Vocational Program)으로 산업체 체류동안은 기업체가 급여를 지급

사회복지서비스전공분야 등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

- 고령화에 따른 요양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0년 4.9조원으로 추정될 만큼 급속히 팽창
 - 유료 노인요양시설만 173개(2006년)이며, 노인전문간호사, 노인물리치료사 등은 유망 신종 직종으로 부각
 - 한편, 간병, 개호 등은 ‘고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구직활동에 소극적임

- 대학에서 사회서비스전공을 융복합분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일자리를 개발
 - 간호, 의료, 사회보장, 스포츠 등을 건강복지분야로 융합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익사업단을 운영
 - 수도권 S대학은 심리, 식품영양, 스포츠, 미디어정보전공이 협조하여 지역 내에 가족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도 창출

④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실시 중인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용관련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

- 학교-기업, 지역사회-직업서비스기관 간 커리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중등은 단기 직장체험, 대학은 인턴십, 커리어개발 등을 실시
 - 초·중등학교의 경우 진로지도, 직업설계,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하되 기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현장 경험을 강조

- 학교에도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대학 취업지원서비스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취업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 대학의 취업지원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 대기업에서 채용·인사업무의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을 전문가로 영입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준비를 지도

□ 청년층에게 직업이동의 득과 실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

- 청년층 실업률이 중고령 실업보다 높은 원인 중의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쉽게 이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
 - 그러나 실제 청년패널 조사 결과 일자리 이동과 임금의 변화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⁷⁾
- 대학 취업지원실 주관하에 청년층에게 직업이동의 득과 실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이직하는 경향을 방지

IV. 시사점 및 제언

1. 산업계에서 일자리를 주도

□ 청년인턴의 경우 직무수요에 따른 일자리와 직무개발기회를 적극 제공

- ‘몇 명을 인턴으로 고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인턴제가 될 수 있도록 인턴 프로그램을 산업계가 책임지고 설계
- 산업계는 직무수요를 감안하여 학교와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용은 정부와 분담

□ 중소기업은 스스로 매력도를 높여 청년층을 일자리로 적극 유도

-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지 않고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難望

7) 한국고용정보원 남기성(2007)의 “청년패널을 중심으로 청년층 일자리 이동과 임금변화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보면 이직으로 인한 임금의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 초기 직장이 3~4년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 일자리에서의 정규직으로의 변화가 향후에 임금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일자리 이동으로 인한 정규직 변환은 임금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 스스로 근무여건 개선 등 우수인력의 유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
- 정부의 정책지원과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 창업 및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를 조성

- 청년벤처, 창업 등은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해서는 활성화되기 어려움
- 정부 재정은 지원상 제약뿐 아니라 다양한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기업과 민간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지분 참여하는 방식은 지속적 투자 마인드와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
- 펀드에 참여한 기업은 수익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 노하우 전달, 경영마인드 제고 등을 통해 수익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가능

2. 학교는 고용가능성 제고에 주력

□ 학교가 청년의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

- 청년실업자의 대부분은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중심의 일자리 대책을 강화
-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한 일자리보다는 학교에 머물면서 역량을 개발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일자리도 제공
- 학교의 역할에 연구, 교육과 함께 취업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이 학교의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
- 대학평가시 졸업생의 취업성과 지표를 강화하여 청년층의 고용가능성을 제고

□ 조기 진로 및 경력지도를 통해 고학력화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

- 초중등부터 진로지도, 직업설계,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하되 기업 및 지역 사회가 참여하여 현장 경험을 강조하고 조기에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진로를 선택하도록 유도
-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도 시작해야 할 시점
 - 취업성과가 미비하고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명목상의 4년제 대학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전문직업학교(Professional School), 직업형 전문대학 등을 활성화
- 산업체도 채용기준을 학위보다는 전문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3. 정부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정책프로그램별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청년 취업프로그램별 고용성과 평가를 월별로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천
 - 예를 들어, 해외 일자리 지원의 경우 14개의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현재 해외인턴의 선발은 290명(5.7%)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
- 각 부처의 정책수립 시 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별 고용영향정도를 평가해 성공사례를 전 부처로 확산하고 홍보

□ 정부는 고용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컨트롤타워 가동

- 정부 각 부처의 파편적 정책 나열이 아닌 정합성 있는 종합적 대책을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정부 부처뿐 아니라 기업, 학교 등 고용주체간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
- 정부는 일방적, 행정위주의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업, 학교가 주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을 지원

<참고문헌>

- 권혜자, 노현국 (2008). “최근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변화와 매출액 상위기업의 일자리 동향” (고용이슈 제2008-1호). 한국고용정보원.
- 금재호 (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Journal of Social Science』 9, 27-54.
- 김승택 외 (2009). 『고용과 성장』. 서울: 박영사.
- 김혜원 외 (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6-01). 한국노동연구원.
- 남기성 (2007). “청년층 일자리 이동과 임금 변화에 대한 소고: 청년패널을 중심으로” (고용이슈 제8호). 한국고용정보원.
- 남성일 외 (2008).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II: 글로벌 기준과 제도개선』.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남재량 (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8-05).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 (200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시행계획”.
- 박강우, 홍승제 (2009).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WORKING PAPER 제36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박찬임 외 (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정책자료 2007-02). 한국노동연구원.
- 박희열 (2008).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방하남 외 (2007). “고용의 질: 거시·기업·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연구보고서 2007-02). 한국노동연구원.
- 오성욱 (2008a). “구직서비스 유형별 취업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오성욱 (2008b).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인기업의 재이용촉진을 위한 구인서비스 향상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이규용 외 (2006). “2004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평가: 추가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자료 2006-03). 한국노동연구원.
- 이성호 외 (2008). “SOC 투자의 신조류, 스마트 SOC” (CEO Information 제 696호).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청년층) (2008. 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3년~2009년 1월).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표 (2003~2009년).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설계서 및 코드집 (2003~2009년).
- 통계청. 고용동향. 각 월호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천영민 (2009). “잡은 이직, 임금 높이는데 도움 안 돼” (보도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최재봉 (2006).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Co-op 프로그램”. 삼성경제연구소 세미나 자료.
- 한국산업기술재단 (2009). 학교기업지원 사업설명회 자료